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사회적 복지대타협  
[발제자]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일 시]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49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High-speed Quantum Society라고 정의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현안 과제인 재정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아직 오지 않은 코로나19 이후의 문제 까지 고려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선제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실업을 억제하고 안정적 직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 시스템에도 AI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들을 접목시켜 계층에 따라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그 방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계-기업-정부의 신뢰를 강화하여 서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바탕으로 건강생태계, 경제생태계, 사회생태계가 유지될 때 가능할 것이다.

## ◆ 복지 환경과 정책

### 가. 복지체계의 문제와 부작용

- ◆ 현행 복지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를 시대에 맞게 고치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에 대한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상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 주도 저성장, 대량실업, 비정규직의 일반화에 더하여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매장이 없는 소매업, 핀테크,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단계를 뛰어넘는 사회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코로나 경제로 인해 대면 거래보다 온라인, 배달 중심의 산업들이 확장되고 있다. 국가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 지출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재정지출과 복지 정책이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결과는 개선은커녕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 나. 재정구조의 악화

- ◆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개혁이 미뤄지면서 정부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가능성과 국민연금 적자의 국가부담금화로 국가의 부채 증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로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비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재정 적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금 등이 인상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은 근로자의 감소는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보험을 부담하는 국민까지 줄어들게 한다. 노동의 저생산성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 결과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입이 주는 상황에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면 국가 부채가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국채 이자율을 상승을 유발한다. 이 결과 국채 부담을 위해 또 다른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된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다.

## 다. 2020년 경제 상황

- ◆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더하여 빈곤층까지 급증하고 있다. 중산층 붕괴로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향후에는 정규직 또한 안정적일 수 없다. 때문에 빈곤층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 주도 경제의 가속화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기술주도경제의 부응한 새로운 고용 창출이 필요하지만 이마저 정부의 규제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전망도 비관적이다.

### ◆ 왜 복지개혁인가

- ◆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60년도에 약 160%의 국가 부채를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지출구조는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비율이 높다. 복지 부분의 법정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위기에 당면할 것이다.
- ◆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에 따른 복지지출이 있었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의 빈곤층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소득 분배 후에는 불과 3% 감소했다. 반면 스웨덴은 25% 수준에서 소득 분배 후 9% 감소했다. 지니계수 역시 복지지출이 이루어진 후에 0.04%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앞으로 기초연금의 증액이나 필수 생활비를 국가에 전가시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비, 공무원 중원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미래세대의 불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 ◆ 공정한 복지

- ◆ 우리나라 복지개혁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이다.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나아가 차등의 원칙으로 사회 소수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maximin'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본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분배적 복지정책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롤즈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복지를 공정으로 본다. 롤즈의 공정과 문재인 정부의 공정은 전혀 다르다.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시스템으로는 충분한 복지가 제공되지 않는다. 복지

는 다양한 민간부분의 공급 시스템, 비영리 단체, 영리 단체 등 누구든지 제공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복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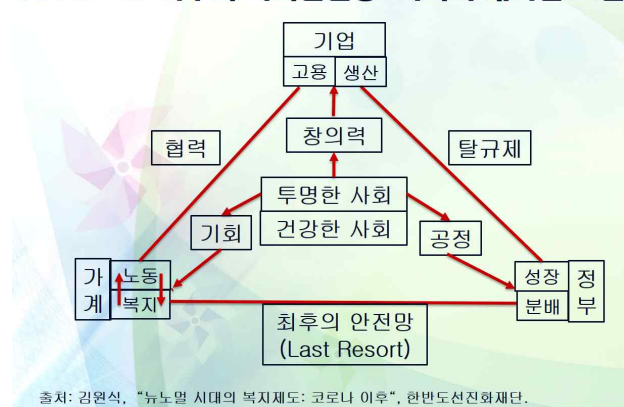
### ◆ 복지정책에서 사회발전정책으로 전환

- ◆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을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소통하며 사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드론, 로봇 같은 ICT 분야의 발전은 복지 부분의 공급능력을 확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 시스템은 복지정책 그 자체보다는 사회발전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 ◆ 빈곤층에게 더 많은 복지 제공을 통한 질적인 생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낙오자들을 보호하며 공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 4차 산업혁명기술에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등의 요소를 결합한 소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러한 학자와 정부 관료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positive society(긍정적 사회)라고 정의한다.

### ◆ 코로나 이후의 사회안전망: 사회적 대타협 모델

- ◆ 청년 복지 정책은 노인 복지 정책과는 다르다. 노인 복지 정책은 보호 중심으로 가능하지만 청년 복지 정책은 앞으로 50~60년의 비전과 인생단계별 실행 가능한 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 청년시절에는 직업과 직장, 결혼 후엔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육아 후엔 자녀들의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쟁적 교육 시스템, 중년에는 직업재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복지사회의 문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COVID-19 이후의 사회안전망: 사회적 대타협 모델



## 가. 경제주체의 상호 신뢰제고

- ◆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현재 사회 환경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적일 수 없다. 가장 먼저 복지 시스템이 망가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업, 가게, 정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나 가게가 실직을 당하면 바로 복지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면 복지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고용과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단순히 복지 문제뿐 아니라 성장을 통한 공정한 배분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경제주체 간의 신뢰에서 비롯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개인과 가게에 대해 평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 노력을 격려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 현재의 무상복지 시스템은 최후의 안전망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 나. 경제주체의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

- ◆ 모든 경제주체는 공정사회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건강, 교육, 주거 보장은 가게의 핵심적인 욕구로써 사회로부터 기회 보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방적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 결론

-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겹친 한국의 시대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대량실업, 고령화, 양극화, 포퓰리즘적인 평등주의, 현금복지에 따른 재정 불안정, 시장의 붕괴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장기능의 재건을 위해 소셜 엔지니어링을 강화해야 한다. 사유재산권 보장과 나눔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복지산업화를 통해 사회 보장 비용을 절감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성장모델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 고용 있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적해서 발전할 수 있고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